

## 맑스-베블렌 커넥션: 政治經濟學과 制度經濟學의 잃어버린 고리에 관한 研究\*

金 榮 容\*\*

### 논문 초록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잠재적 상호이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이론 간의 공통분모를 추출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두 이론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적 코드, 다시 말해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간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를 발굴해 낼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글의 목적을 위해 맑스와 베블렌 이론 모두에 내재한 '이중성(dichotomy)' 개념에 주목하였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인 이중성 개념에 기초할 때, 맑스와 베블렌 사후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내부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이론적 논쟁들의 본질적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현저한 이론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 간의 차이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정치경제학, 제도경제학, 이중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3, B4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BM1001). 한편 익명의 두 심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들은 글을 아주 세밀히 검토해야만 가능한 지적을 통해 필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논문의 문제점들을 일깨워주었다.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면 그것은 이들의 노력 덕분이다.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책임연구원, e-mail: wolf1000@postech.ac.kr

## I. 도 입

오늘날 정치경제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맑스 정치경제학과는 다른 방법론을 가진 경제학을 자신에 접합시켜 자신의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 서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정치경제학에 제도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의 엔진’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은 이론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이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두 이론 간 대화의 장벽이 되어왔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제도적 분석을 포괄함으로써 현실 분석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제도 경제학 역시 정치경제학적 통찰을 수용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잠재적 상호 이득(mutual gains)을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이론 간의 공통분모를 추출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적 코드, 다시 말해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간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를 발굴해 낼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현재의 제도경제학 발전의 상황을 두고 보건대, 정치경제학의 대화 파트너로서는 신제도학과보다 구제도학과가 유망하다. 초기 신제도학과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 이후 남겨진 것은 이론적 한계가 있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구제도학과가 정치경제학과 꽤 상당한 정도의 연구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재인식되었다(김영용 2002). 따라서 이 글에서 두 이론 간의 잃어버린 고리의 발견은 주로 맑스(K. Marx)와 베블렌(T. Veblen) 이론 간의 커넥션 문제를 통해 검토될 것이다.

‘맑스-베블렌 커넥션(Marx-Veblen Connection)’이란 표현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필립 A. 오하라(Phillip A. O’Hara)였다. 그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맑스와 베블렌 모두가 물질적 삶의 실제 제도들과 사고·이데올로기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인식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정치경제학의 유물론적 입장을 발전시켰다(O’Hara 2000)”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맑스와 베블렌 간의 이러한 관련성은 이후 급진파 경제학자들(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cs)과 진화적 제도주의자들(Association for Evolutionary Economics) 간의 이론적 친화성으로 이어졌다(O’Hara 1995).

한편, 루카 피오리토(Luca Fiorito)는 왜 오늘날 맑스주의자들이 제도학과와의 전통

에 의지하기 보다는 신고전파와 계량경제학에 의존하게 되었는데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맑스주의와 제도주의 간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라는 수사(修辭)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맑스의 이론은 ‘리카도의 연역적·정태적 경제이론’과 ‘경제의 누적적 변화에 관한 제도이론’이 모순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맑스주의자들이 오로지 후자에 집중함으로써만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사이의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오하라와 피오리토의 연구는 맑스와 베블렌, 그리고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간의 이론적 방법론적 관련성을 지적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비록 선행 연구자들이 사용하였던 표현과 수사를 채택하였지만 그들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그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중성(dichotomy) 개념들이 도입될 것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 맑스와 베블렌에 대한 체계적 비교와 둘 사이의 공통 분모를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그들 사후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진영에서의 이론적 발전 역시 설명할 것이다.

## II. 맑스

맑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분석하면서 구체적 연구 대상들을 항상 소재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의 결합인 이중성(dichotomy) 개념을 통해 이해하였다. 예를 들어 기계는 소재라는 육체로 실존하지만, 그 육체에 가치라는 사회적 영혼이 깃들 때 비로소 자본이 된다. 전자는 초역사적인 성격을 갖는데 반해 후자는 역사적인 성격을 갖는다. 쓰루(S. Tsuru)에 따르면 사회적 생산과정 역시 이러한 이중적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바로 가치적 측면이 제도적으로 조건지워진 사회경제적 범주라는 함의를 갖는다(Tsuru 1993). 이러한 맑스로부터의 제도적 계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명제 하나를 얻을 수 있다.

[명제 1] 제도란 사회적 관계, 그 가운데에서 특히 생산관계가 결정화(結晶化)된 것이다.

이 명제는 가치가 사회적 관계라는 사실로부터 주어진다.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출발이 되는 이러한 통찰은 다음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제도형태들은 근본적 사회관계의 성문화·공식화로 정의된다. . . . 제도형태는 행위 및 사회경제적 규칙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로써 정의된다(Bazzoli et al. 1994, p. 1157).

제도가 사회적이라고 할 때, '사회적(the social)'라는 표현은 다음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①그것은 무엇보다도 관계적(the relational)이라는 의미이다. 관계적 접근이란 사회를 하나의 통일체로 다루며, 따라서 개별적 사물이나 요소에 관해 말하기보다는 관계(relation)나 과정(process)을 중요시 여긴다. 즉 현실에서 사회의 어떤 측면도 다른 모든 측면과 분리되지는 않으며, 사회적 과정의 모든 측면은 다양한 측면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Sherman 1995). ②한편 이러한 '관계'나 '과정'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가변적(the historical)이다. 역사적 접근이란 선택과 추상의 문제에 있어 하나의 특별한 양식을 의미한다. 선택과 추상의 문제에 있어 또 다른 한 가지 접근법은 대상의 특수한 성격을 추상하고, 모든 시스템에 공통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만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이다. 반면 역사적 접근법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의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것에 집중하는 방법을 말한다(Dobb 1973).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대비의 두드러진 사례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이론들이다. . . . (그 하나가: 번역자) 순수 교환이나 시장 이론을 포괄하는 이론 유형으로 이 경우, 경제 문제는 '자연적' 혹은 보편적 차원에서 검토된다. (또 다른 하나는: 번역자)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소득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제도적' 요소들에 우위를 두고, 주로 '제도적' 형성 안에 경제적 문제를 위치 지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판적 분석"이 1권의 부제인 맑스의 <자본>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Dobb 1973, p. 26, 강조: 번역자).

이러한 맑스 정치경제학의 이중성, 그리고 그로부터 유도되는 제도적 계기는 맑스 자신의 전 이론체계를 관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체계에서 이론적 토대에 해당하는 가치론의 경우, 이러한 이중성과 그것의 제도적 함의에 관한 문제의식은 매우 분명하다.

그(맑스: 번역자)는 가격 범주의 유효성이나 객관적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

라미터 조정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사물의 자연적 속성처럼 보이는 것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 .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왜 인간의 노동 생산물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상품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는가 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보다 가치 크기를 결정하는 힘들을 분석하는 것은 훨씬 덜 중요했다. . . . 이러한 사회 유형 아래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으로 관련되는 특별한 방식은 쉽게 파악될 수 없고, 대신 스스로를 상품과 화폐 사이의 다양한 수량적 관계로 나타내며, 그러한 것들에 독립적인 사회 주체의 존재라는 외양을 부과한다(Tsuru 1993, p. 25).

균형은 맹목적인 시장의 힘을 통하여 오로지 우연적으로만 도달한다. 주류경제학자들이 집착하는 가격 변동은 가장 유리한 가정 안에서만 이 균형이 어떤 압력과 어떤 방향에 의해 움직이게 될 지를 가리키는 유일한 신호다. 그것들은 무엇이 균형되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이러한 변동 이면에 숨겨진 추동력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맑스가 자신의 노동가치 이론을 통해 답하려고 노력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 . . . 그의 문제는 어떻게 새미(Sammy)가 달리는가(상대가격의 기술적 결정: 번역자)가 아니라 무엇이 새미를 달리게 하는가(상품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 분석: 번역자)였다(Mandel 1981, p. 39).

비록 하나의 대상 안에 두 가지 모두가 공존하지만, ‘가격-노동 생산물-수량적 관계’를 대신하여 맑스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가치-상품-사회적 관계’였다. 후자의 계열은 관계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맑스의 분석은 제도적이다.

대상의 실제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의 모순적 통합, 그리고 초역사적인 소재의 그릇 안에 역사적인 가치의 내용물이 담겨진 또 다른 사례가 재생산론이다.

맑스의 재생산 표식에 등장하는 생산물은 생산재(I 부문 생산물)이거나 소비재(II 부문 생산물)이며, 반드시 ‘고정자본(C)+가변자본(V)+잉여가치(S)’라는 가치구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가치 구성에서의 개별 항목들은 그 자체로 특정 물리적 생산물에 대한 수요이다(Tsuru 1993, p. 9).

투입산출표 내에서 생산의 산업간 구분을 위한 모티브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생산 계획의 성취라는 기술적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번역자) 맑스의 구분은 가치로서의 자본이 불변 및 가변자본으로 분할되는 것과 조응한다. 이러한 자본 구분은 노동가치론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맑스의 모티브는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다. 투입산출표에 반영된 기술적 필요는 모든 사회 생산 시스템에 적용되지만, 불변 및 가변자본의 구분, 따라서 부문 I과 부문

II 간의 구별은 사회적 생산의 자본주의적 조직화만을 특별히 반영한다(Foley 1986, p. 37).

여기서도 물리적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가치구성, 기술적 필요성과 재생산의 사회적 조건이 구분되고 있으며 각 경우 후자가 역사적 함의를, 따라서 제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맑스의 이론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이 이중성은 각각 본원적 규정성과 역사적 규정성이라는 방법적 구분과 관련된다.

또한 이중성의 문제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지위와 곧바로 연결된다. 언젠가 스위지(P. Sweezy)는 “맑스 경제학이 자본주의의 경제학이고, 자본주의 경제학(신고전파의 경제학)은 사회주의의 경제학”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 말을 통해 맑스 경제학이 자본주의 시장의 기저에 존재하는 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표준적인 신고전파적 분석은 오히려 사회주의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였다(Sweezy: Landreth and Colander 1994). 이러한 그의 말뜻은 “경제학이 과학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본주의 아래에서 뿐이다”라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아래에서만 대상이 소재와 가치의 형태로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자본주의적 제도 상태 간의 괴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전파적 자원배분 이론은 경제 문제가 순전히 기술적인 성격으로서만 존재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타당하며, 그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분석 가이드로 삼는다는 것은 적대적인 사회적 관계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외의 사회에서 경제학은 제도(institution)를 다루는 과학이 아니라, 사물(matter of facts)을 다루는 테크닉이 될 것이다. 이중성은 현실의 적대적 사회관계가 종결된 다음에야 사라진다. 로자 룩셈부르크(R. Luxemburg)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번역자) 자본주의 사회의 무정부적 생산양식이 실제적인 경제적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자유 경쟁과 화폐경제체제가 실제적인 경제 체관계 등을 왜곡된 형태로 표출시킨 결과,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이 성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 . . 그리고 또한 . . . 전 노동계급에 의해 의식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계획경제는 더 이상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Froelich 1967, pp.184-185).

로머(J. Roemer)는 역사유물론이 “기술 및 제도와 그것들의 변화(Roemer 1986)”에 관한 연구에 다름 아니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 매우 흥미롭게도 기술과 ‘생산관계가 체화된’ 제도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변화라는 아이디어는 베블렌의 평생에 걸친 주요한 연구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영국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운동법칙을 규명하려던 시도와,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화적 제도주의를 수립하려던 시도가 동일한 문제의식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 III. 베블렌

베블렌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 가정과는 전혀 상이한 본능(instincts)과 습관(habits)이라는 인류학적 개념에 의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제작 본능(workmanship)과 약탈 본능(predatory instincts)이라는 매우 상이한 유형의 본능에 영향을 받는데 이에 따라 인간 행동 역시 사실 지식(matter-of-fact knowledge)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위와, 사고 습관(habits of thoughts)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위로 구분된다.

행위가 보다 구조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현실에서는 그 이중성이 기술(technology)과 제도(institution) 사이의 구분으로 드러난다. 전자가 물질적 진보를 촉진하고 사회 내 모든 개인들과 계급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경향임에 반해, 후자는 계급이나 사회집단들 간의 위계구조를 영속화시키고 지배 및 피지배 구조를 승인하는 이데올로기를 촉진한다. 맑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소재와 가치, 물리적 대상과 사회적 대상 간의 이중성이 베블렌에게는 기술과 제도로 나타났다.

제도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정착된 행위 패턴’으로, 과거나 전통이 그 정당성을 보장하는데 동원되는데 이로 인해 제도는 의식적(ceremonial) 성격을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는 적대적인 생산관계가 제도를 지배한다. 왜냐하면,

생산은 항상 사회적인 반면에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생산의 배분을 규정하는 사유 재산의 법칙은 사적·개별적이었다. 이것이 . . . 하나의 기본적인 사회적 갈등을 표현하였다. 모든 인간의 진보는 사회적 생산에서의 진전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

러한 진전은 일반적으로 ‘제작정신’ 본능의 산물이었고, ‘호기심’ 본능의 결과였다. 사유재산은 ‘약탈적인 본능’의 산물이었고, ‘제작정신의 본능’과 대립하였다(Hunt 1979, pp. 500-501).

이러한 제도경제학의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찰이 명제 형태로 주어진다.

[명제 2] 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적대적인 자본주의적 제도들로부터 기인한다.

제도와 기술 간의 원형적(archetypal) 대비에 토대를 둔 생산관계의 적대성은 베블렌의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제도 분석에서 절정을 이룬다. 오늘날 기술과 제도 간의 갈등은 산업(industry)과 비즈니스(business) 간의 대립으로 표출된다.

생산관계의 핵심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제도인 사유재산의 기원은 야만적 강탈과 약탈적 착취에 기반해 있다. 이러한 사유재산은 산업 측을 대표하는 고용 노동자와 비즈니스 측을 대표하는 부재 소유자(absentee owner)로 구성되는 사회적 계급의 토대가 된다. 각각의 대리인을 앞세운 이러한 제작 정신과 약탈 정신과의 갈등과 투쟁은 그 원인이 부재 소유자 계급들의 부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 속에 제도적으로 내재된(built-in)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그 무엇보다도 두 계급 간의 사보타지의 형태로 진행된다; 노동자들은 작업조건 개선, 임금 증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혹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습관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산업 사보타지, 즉 스트라이크를 활용한다. 흥미롭게도 베블렌은 노동자 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나 부재소유자들 역시도 사보타지를 활용한다고 보았다.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의도적인 효율성의 철회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산출물 감소를 목표로 한 기업 간 연합, 유휴 설비의 유지, 생산성 둔화를 통한 가격의 인상 등이 그 대표적 전술들이다(Mouhammed 2000).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 즉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상호 사보타지의 성격을 갖는다. 이 상호 사보타지 과정은 “각 측은 다른 측을 희생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공공연한 전략적 원칙에 기초한 적대적 세력 간의 분쟁(Veblen: Hunt 1979)”이다. 결국 사유재산제도라는 자본주의적 제도는 적대적인 사회관계·생산관계의 진원지이다.



이러한 적대적 생산관계로부터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부재 소유자의 사회 지배가 보장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모방적 소비, 이데올로기의 힘 때문이다(Hunt 1979). 부재소유 및 고용노동 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제일차적인 업무는 사유재산법의 시행 및 소유와 결부된 특권의 보호이다. 따라서 의회 정부는 비즈니스 정부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본능 속에 남아 있는 반비지니스적 경향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를 체제 내화시키기 위해 노동자의 모방적 소비가 자극된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로부터 탈출이 어려운 소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채찍과 당근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것이 애국주의와 군국주의, 제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이다. 노동자 계급에게 이러한 심리적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피 속에 남아있는 제국 정신적 속성을 잊게 만드는 정신적 물편에 해당한다.

베블렌의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독점자본주의 시기 점차 격화되어가고 있었던 생산관계의 적대성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현대 산업 체제의 주축들에 해당하는 사유재산제도 아래에서는 그 어떤 암투와 불안도 피할 수 없다. 이 비천한 형태의 제도가 존속되는 한, 불만은 계속될 것이며 이로부터 그 어떤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Veblen: Hunt 1979).” 이것이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나가는 과정은 곧 베블렌 사상의 급진화 과정이기도 하였다. 1) 여기서 ‘급진적(radical)’이라는 수식어는 스탠필드(J. R. Stanfield)의 해석에 따르자면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적 질서 유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Stanfield 1995).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아래에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며 이기적인 인간 본성은 이러한 제도들과 일치한다”라는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베블렌에게 있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2)

1) 베블렌은 오늘날 급진적 제도주의(radical institutionalism)의 선구자로 손꼽힌다.

2) 비록 베블렌이 근본주의적 맑스주의에 대해 적의를 가졌고 길드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의 급진성은 그로 하여금 볼셰비키 혁명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게끔 만들었다: “볼셰비즘은 혁명적이다. 그것의 목표는 산업의 영역에 민주주의와 다수 지배를 옮기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존 질서와 거기에 기초해 부를 얻는 자들에게는 위협이 된다. 그것은 사유재산·비지니스·산업·국가 및 교회·법과 도덕·세계평화·문명·인류에게 위협인 것으로 비난받는다. 그러나 볼셰비즘은 기독교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겠지만 그 밖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무해한 것이다(Veblen: Fiorito 1997, p. 9).” 1929년 그의 사망 6개월 전, 베블렌은 그의 이웃인 피셔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적으로 또 다른 발전들이 생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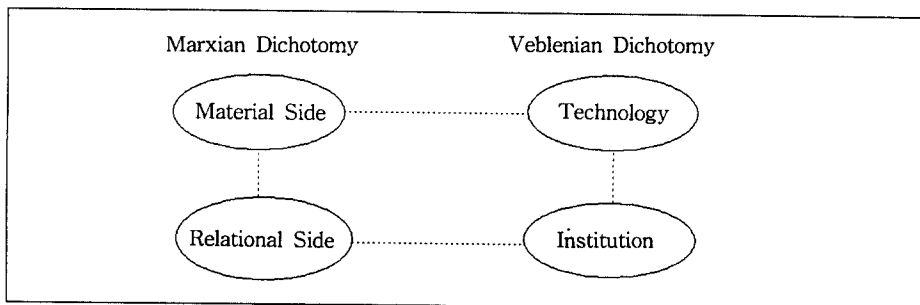
그러나 그의 급진성은 또 다른 맥락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급진성의 두 번째 의미는 경제시스템의 근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경제시스템의 기저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놓여져 있다. 전자의 경우 권력·계층·제도 등의 범주가, 후자의 경우 노동·기술 등이라는 범주가 대응된다. 베블렌은 이들 범주들이 즉, 제도와 기술이 모든 경제적 삶의 뿌리이고 따라서 경제학 연구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Stanfield 1995).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두 가지 급진성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베블렌은 두 번째 의미의 근본성을 통해서 첫 번째 의미의 근본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명제 2]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제도와 기술이라는 이중성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와 기득권을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 IV. 커넥션

앞서의 두 명제들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맑스의 경우 분석의 자연스러운 과정은 추상적인 생산관계로부터 구체적인 제도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반면 베블렌에게 있어 그 방향은 반대로 제도로부터 생산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칭성은 맑스와 베블렌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 개념으

〈그림 1〉 맑스와 베블렌의 이중성



로부터 출발한다. 맑스는 자신의 연구대상을 소재적인 차원과 가치(=사회관계)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와 흡사하게 베블렌은 사회의 구조와 진화를 설명하기

나겠지만 지금은 공산주의가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고 본다(Dorfman: Fiorito 1997, p. 9)."

위해 기술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분류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명제가 성립한다.

[명제 3] 맑스 이론의 출발점인 생산관계가 베블렌 이론의 도착점인 반면, 베블렌 이론의 출발점인 제도는 맑스 이론의 도착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경우, 생산과정은 그것이 사회적이므로 제도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생산과정을 (생산함수식 접근과는: 번역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 . . 생산은 사회적 과정으로서 상호 간의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이다. 넬슨(R. Nelson)이 주장했듯이 기업은 기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다 . . . (생산성은: 번역자) 주어진 기술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의 동기부여 및 숙련, 경영의 조직 및 감독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는 다시 복잡한 제도적 구조와 루틴, 그리고 문화적 규범에 의존한다(Hodgson 1991, pp. 219-222).

제도경제학의 경우, 그 분석 대상은 궁극적으로 생산관계 분석으로 귀결된다. 제도경제학자 그루키(A. Gruchy)는 제도주의 연구 프로그램을 정의하면서 기술변화가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이해집단 간의 권력관계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정확히 생산력과 생산관계, 자본과 노동에 관한 연구와 대응된다(Tsuru 1993). 제도주의자들은 우리가 대상의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고 이는 결국 제도를 생산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본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야말로 제도로 향하던 맑스와 생산관계로 향하던 베블렌이 조우한 이론적 장소였다. 그 곳에서 베블렌은 다음과 같은 맑스의 말을 듣게 된다.

흑인은 흑인이다. 일정한 관계 하에서만 그는 노예로 된다. 면방적 기계는 면화로 실을 뽑는 기계이다. 일정한 관계 하에서만 그것은 자본으로 된다. 이러한 관계 밖에서는 그것은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금이 그 자체로서는 화폐가 아니며, 또 사탕이 사탕가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 . 자본은 사회적 생산관계이

다. 그것은 역사적 생산관계이다(Marx 1975, p. 555).

같은 곳에서 또한 맑스는 다음과 같은 베블렌의 말을 듣게 된다.

자본은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소재적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적 법률 및 제도의 산물이다. . . .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관계에 수반되는 사실이다. 이것은. . . 그 범위가 전적으로 이 관계에 기초한 방법으로 수행된 그러한 생산 이론 내에 한정되는 하나의 경제 범주이다.

자본의 영구적 실체가 머무르는 연속은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소유권의 연속이다. . . . 이것은 다소 교묘하게 간과되고 있다(Veblen: Hunt 1979, pp. 496-497).

‘그들의 머릿속에서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자본주의적 영혼이 그것들의 물질적 실체와 너무나 긴밀히 결합된(Marx 1976)’ 고전과 경제학자들을 맑스가 논박한 것과, ‘알류산 열도의 주민들이 조개를 잡기 위해 마법 주문을 외우면서 갈퀴로 해초와 파도 사이를 긁는 과정이 임금·이자·지대 사이의 쾌락주의적 균형이 수립되는 과정이라고 본(Veblen: Hunt 1979)’ 신고전과 경제학을 베블렌이 비판한 것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등가이다. 맑스와 베블렌 모두 이중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당대 주류경제학의 물신성(fetishism)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맑스와 베블렌의 이중성은 강한 이론적 상사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정치경제학에서 이러한 이중성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보다 근대적인 이중성에 대한 표현은 로트베르투스(Rodbertus)나 바그너(A. Wagner)와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자본을 국민 경제(national economy)적 관점과 사경제(private economy)적 관점이라는 상이한 시각에서 정의함으로써(Rubin 1979) 초보적이지만 이중성에 대한 인식을 향해 한 발 전진하였다. 첫 번째 의미의 자본 개념은 물질적 기술적 측면에 기반해 있으며 그 사회적 형태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생산수단으로 이해되는 반면, 두 번째 의미의 자본 개념은 스스로를 생산의 물질적 과정과 분리시킨다. 이러한 구분은 맑스의 소재와 가치의 이중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제도경제학에서 이러한 이중성의 기원은 철학과 인류학으로부터 주어졌다.<sup>3)</sup> 철학자 듀이(J. Dewey)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의 힘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arts)을 개발하거나 혹은 의식적 의례(ceremonial rite)를 따른다. 이러한 통찰은 말리노프스키(B. Malinowski) 등의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멜라네시아 군도 원주민들이 카누를 제작할 때 실제 작업 과정은 매 단계마다 정교한 의식과 더불어 진행된다. 카누의 제작이 기술과 관련된다면, 의식의 수행은 의례적 제도에 해당한다. 물론 원주민들에게 이 두 측면은 불가분의 전체를 구성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식 없다면 나쁜 기운에 의해 항해가 실패할 것이라는 사고 습관과 항해를 위해서는 현외부재(舷外浮材)가 선체(船體)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식은 서로 상이한 것이기 때문이다(Hamilton 1986). 베블렌은 이러한 이중성이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산업과 비즈니스 혹은 재화의 생산(making goods)과 돈벌이(making money) 간의 구분이 그에 해당한다.

상이한 원천에도 불구하고 이 2개의 이중성은 사회적 삶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 즉, 사적 소유가 지배적이고 이윤이 생산의 목표인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이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갖는 두 측면으로 분할된다는 점이다. 본래대로라면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존재가 가능한 소재와 기술이 자본가와 부재 소유자의 착취 및 약탈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와 제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공동의 통찰은 곧이어 시장에 관한 입장의 일치를 가져왔다. 두 이론 모두 시장 정서(market mentality)를 맹목적 신화(blinding myth)로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맑스 정치경제학의 경우 시장은 소외와 상품 물신성의 메커니즘에 다름 아니며, 보이지 않는 손의 유일한 진실성은 시장 메커니즘이 생산관계의 근본적 사회성 및 적대성을 은폐시키는데 있다. 베블렌 제도경제학의 경우, 시장은 너무나 자주 생산의 발전에 적대적인 의식적 행위들에 의해 지배받으며 재화의 생산과 돈벌이는 서로 이질적인 인간 삶의 두 차원이다. 두 이론 모두 시장 메커니즘의 탈신비화를 추구하였고, 시장 정서가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Stanfield 1995).

두 이론 체계 모두에 내재하고 있는 이중성과 그것들의 공통된 함의에 비추어 보

3) 이는 베블렌, 나아가 제도경제학의 지적 배경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기인한다.

건대 이제 우리는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간의 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이론 진영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이론 간의 최소 공약수가 필요한데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이 공유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명제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명제 4] 자본주의 사회는 이중성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이해될 수 있다.

다름 아닌 이와 같은 공동의 문제의식이야말로 맑스와 베블렌 간의 커넥션, 더 나아가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간의 잃어버린 고리에 해당한다. 맑스 정치경제학자들이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연구 방법이 제도경제학적이라고 확신해 왔고(Dugger and Sherman 1994), 제도 경제학자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분석 대상이 맑스 정치경제학과 친화성을 갖는다(O'Hara 1995)라고 생각해 왔던 것도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 V. 속류화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본주의는 오늘날 독점자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해 들어간다. 이러한 변화는 '축적의 제도화(the institutionalization of accumulation)'로 요약될 수 있다. 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축적에서는 자본가 개인의 요소, 예를 들어 조직화 역량·교활성·영업적 통찰력·냉혹성·행운 등이 중요하였음에 반해, 이 시기에 이르면 축적은 거대기업을 통해 합리화되고 규칙화되었으며 제도화되었다(Hunt 1979).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진영 모두에서 이러한 현실의 변화가 점차 이론적으로도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맑스 정치경제학 이론 진영 내에서 생산관계로부터 제도로의 분석 초점의 이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직화된 자본주의론(the theory of organized capitalism)'의 출현과 사회경제적 삶의 제도화 경향을 반영하는 이론으로 표출되었다(힐퍼딩, R. Hilferding). 반면 베블렌 제도경제학 진영 내에서 제도로부터 생산 관계적 함의를 도출하는 작업은 전후 거대 기업과 노조의 출현, 대중 소비사회의 등장을 반영하는 '전후법인기업체제(postwar corporate system)'의 논의들로 표출되었다(갈브레이드, J. K. Galbraith).<sup>4)</sup>

비록 그것이 생산관계의 형식화의 심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조직화 및 생산관계의 제도화 과정은 정치경제학의 제도적 분석 및 제도경제학의 생산 관계적 분석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켰고 이들 이론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모든 이론과 사상의 확산 과정은 동시에 그 이론과 사상의 핵심이 통속화되고 변질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독교의 경우, 그 사상의 대중화는 예수의 신격화를 수반하였으며 신격화의 동기는 신흥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회의 권위주의자들은 비판적인 마르코 복음서를 왜곡하기까지 하였다. 예수의 신격화 과정을 통해 모든 교회에 대한 비판을 분쇄한 이후, 기독교는 예수의 본래 지향과는 정반대로 로마제국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였다(元田 厚生 1998). 이와 거의 흡사한 일이 맑스와 베블렌 사후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에서도 발생하였다.

1849년에 씌여진 <임노동과 자본>이라는 팜플렛에서 맑스는 기술의 혁신이 불가피하게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지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생산자들 서로 간에 맺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 즉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활동들을 교환하고 생산이라는 공동 행위에 참여하는 조건들은 당연히 생산수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화기라는 새로운 전쟁도구의 발명과 더불어 군대의 내부 조직 전체가 필연적으로 변화하였고, 개인들이 군대를 형성하고 군대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관계들이 변화하였으며, 각 군대의 상호관계도 변화였다. 개인들이 그 속에서 생산을 행하는 사회적 관계들, 즉 사회적 생산관계들은 따라서 물질적 생산수단들, 생산력들의 변화 및 발전과 더불어 변화하고 변모한다 (Marx 1975, p. 556)

동일한 말일지라도 맑스 자신에게는 미묘한 긴장을 가지고 이해되었던 소재와 가치, 기술과 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관계가 그의 후계자들에게는 쉽게 무시되고 잊혀져 갔다. 후계자들은 이론적 이중성이 가지는 풍부한 지적 잠재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맷돌은 봉건 영주의 사회를, 증기 제분기는 산업 자본가의 사회를 가져다 준다”라는 식의 기계적 해석에 만족하였다.<sup>5)</sup>

4) 이러한 경제의 제도화 과정은 생산관계의 형식화(the formalization of production relations) 심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생산관계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재산제도, 기본 계급구조, 시장을 향한 상품생산 등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토대는 여전히 불변이었다.

5) 이러한 기계적 해석은 소위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 되는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맷돌이 봉건

이해 과정에서의 지나친 단순화와 그로 인한 이론의 속류화는 경제주의(economism)라는 오류를 낳았으며 그 첫 번째 희생자는 1890년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었다. 당시의 사회민주당은 기술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발전하며, 개선된 기술은 조만간 자본주의적 제도와 충돌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발전을 억압하는 제도로 인해 기술이 완전히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기술이 구래의 자본주의적 제도를 파괴할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기술 개선에 가장 적합한 제도인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이다(Dugger and Sherman 1997). 경제주의라는 이론적 오류로 인해 사회민주당은 잘못된 정책과 운동의 방향을 고집하게 된다. 그들은 노동자 정당이 기술과 제도 간의 모순이 극대화되는 결정적 시기까지는 역량을 모으고 대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략을 추종하게 되었다.

전후 속류화의 또 다른 희생자는 소비에트 맑스주의였다.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 1980년대 말 붕괴에 이르기까지 소련에서 기술에 대한 표준적 공식적 견해는 '기술 자체의 중립성과 기술 이용에 있어서의 계급성'으로 요약된다. 즉 생산력 발달 그 자체는 진보적인 것이고, 다만 생산관계의 성격이 생산력 발전의 수준을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이용이다(박형준 1991). 동일한 컨베이어벨트일지라도 사적 소유가 폐지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활용된다면, 기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노동자 착취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생산력 발전에 동원된 셈이다. 그러나 기술 자체와, 그 이용 방식의 사회적 맥락(=제도) 간의 단절에 기반한 소련의 과학기술론은 이론적으로 소박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앞서 독일 사민당의 경우 기술을 언제나 독립 변수로 이해한 것이 오류의 원인이었던 반면, 소련 공산당의 경우 기술 그 자체도 '물질화된 사회적 관계'라는 사실에 무지했다는 점이 오류의 원인이 되었다.

기술과 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관한 기계적 해석은 베블렌 이후 제도경제학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베블렌은 기술과 제도에 관한 관계를 논의하면서 기술이 동태적인 힘을 가지며, 기술의 발전이 소유권이나 사회경제적 구조와 같은 의식적 제도를 추동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원래 그가 생각했던 기술-제도 간 관계에 의하면 재산권을 포함한 의식적 제도들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산물일 뿐만이 아니라 중단기적으로는 기

---

영주가 지배하는 사회를 가져왔고 중기제분기가 산업자본가가 지배하는 사회를 가져왔다면 사실상 초소형 컴퓨터는 정보사회를 가져왔다(Dyer-Witheford 1999, p. 70)."



술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Ekelund and Hebert 1997). 그러나 베블렌의 후계자들에게 이러한 복잡한 전후 사정이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된 것은 아니었다.<sup>6)</sup>

제도경제학 분야에서 ‘기술과 제도 간 모순’에 대한 오해는 문화 지체(cultural lag) 개념으로 투영되었다; 진보적인 기술은 수동적·방해적 제도와 공존한다. 기술은 그것을 길들이는데 필수적인 사회 조직·제도를 고안하는 우리의 능력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발전한다.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항상 지체하는 제도로 인해 언제나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Hamilton 1986). 이러한 입장에 설 경우, 기술변화는 내재적으로 진보적이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진보주의(progressivism)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진보주의는 경제 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함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기술-제도의 이중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경제성장이란 전통적 조직 행위양식의 타성(=제도)에 대항한 기술적 변화 압력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 과정에서 제도의 역할은 기술적 활용을 허용하고, 기술 변화와 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혼란의 극소화를 위한 조정 기능(adjustment function)에 한정된다(Samuels 1977).

제도학파의 문화 지체 개념이 독일 사민당의 경제주의와 ‘제도의 소극적 역할’이라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었듯이, 베블렌 이후 대표적인 제도학과 경제학자였던 에이리즈(C. E. Ayres)는 소련 공산당의 생산력주의와 유사하게 ‘제도와 기술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에이리즈와 에이리즈언(Ayresian)들에 따르면 분석가는 진보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도구·기술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진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의식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용법을 통해 이중성 개념은 구체화된다. 즉 그것들은 2개의 상호 배타적인 카테고리들을 구성한다. 베블렌에게 있어 제도와 기술 범주들은 실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었으며 범주와 현실 간의 일치(fit)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도구였던 반면, 에이리즈에게 있어 이는 분석자가 밝혀내기를 원하는 구체화된 인간 행위의 보편적 측면들이었다. 전자의 범주 도식(categorization scheme)은 이제 후자의 손에서 인간 행위의 기본적 전략으로 변질된다(Waller 1994).

6) 물론 속류화의 원인으로 베블렌 자신이 기술-제도 간 관계를 빈약하거나 비일관적으로 정의하여 초래된 혼란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이 점에 관한 한 맑스 역시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회의 변화 논리를 둘러싸고 진행된 속류화 과정에서 양 진영은 각각 생산력과 생산관계, 기술과 제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통속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①어린이(=생산력)는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반해 옷(=생산관계)의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고 어느 순간엔가 더 이상 옷이 어린이의 몸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②마차를 대신하여 자동차(=기술)가 도입되었으나 운행 패턴(=제도)은 그대로인 경우, 3피트의 간격을 두고 시속 60마일의 속도로 서로 마주보며 지날 수는 없다(Hamilton 1986). 이 경우 자동차의 발명은 구래의 운행 패턴으로 인해 그 잠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발휘될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다음의 사실이 다소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론의 세속화 및 속류화 과정들은 애초의 문제의식으로부터의 이탈을 반영한다. 맑스 사후 정치경제학은 생산관계로부터 구체적인 제도의 문제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계급투쟁에 관한 이론만 가지고 기술과 제도의 이론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주의(economism)라는 오류에 빠져들게 된다. 기독교의 세속화 과정에서 예수의 본래 지향이 부정되고 기독교의 정신이 제국 경영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것처럼, 맑스주의의 속류화 과정에서도 맑스의 통찰은 그 풍부함이 사라지고 소비에트의 단순한 공업화 논리로 변질되었다.

반면 베블렌 사후 제도경제학은 제도로부터 생산관계의 문제로 전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기술과 제도에 관한 이론만 가지고 계급투쟁에 관한 이론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주의(progressivism)라는 오류로 빠져들게 된다(Dugger and Sherman 1997). 예를 들어 에이리츠의 경우, 베블렌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산업 대 비즈니스의 갈등은 사라지고, 변화에 대한 저항은 오로지 무지(미신·전설·몽매)의 힘에서만 찾아진다. 같은 말이지만 그에게 있어 계급(class)은 신화(myth)로 대체된다.

비록 사후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소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사이에 이론적 대화가 처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속류화 과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VI. 고 훈

기술만이 유일한 독립변수이고 동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사민당의 경제주의와 제도학파의 진보주의는 본질에 있어 동일하다. 한편 생산력과 생산관계(혹은 기술과 제도)의 상호 전제와 교호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를 고립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소비에트 맑스주의와 에이리즈언들의 분석은 함의에 있어 동일하다.

이러한 이론의 난점과 공백, 오류와 비현실성에 대해 각 이론 진영 내부에서는 많은 논쟁과 이를 통한 자기반성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정치경제학 내부에서는 경제주의 및 생산력주의 도그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해졌다.

맑스주의 내에서의 경제주의의 특권적 테제인 생산력 우위 테제와는 반대로 생산관계의 우위테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결합이 생산관계의 사회적 형태와 그 효과 하에서 실현된다는 것, 생산력은 분명히 생산관계와 구분되고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지만 특정의 생산관계의 고유한 결합의 효과 속에서만 비로소 생산력으로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자본〉 이후 백년 이상 수많은 맑스주의자들이 잘못된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생산관계의 우위라는 변증법적 테제를 생산력 우위라는 기계론적 명제의 반사적 대립물인 주관주의적 테제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생산관계의 존재란 다름 아닌 노동과정에서의 물질적 효과와 실현의 제 형태이며, 따라서 기존의 생산력의 토대 위에서의 생산관계의 물질적 실현 및 그 경향적 전파와는 독립적인 생산관계의 발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자연적 노동과정, 다음에 그 이후 노동과정에 중첩되는 사회적 과정(착취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동일한 복합적인 사회적 과정만이 존재할 뿐이다(Balibar 1974, p. 250).

이 비판에 따르자면 소비에트의 과학기술론의 경우, 그 외양은 생산관계 우위론의 형태를 띠지만 “생산력 우위라는 기계론적 명제의 반사적 대립물인 주관주의적 테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기술 자체’와 ‘기술의 이용’을 기계적으로 구분하기(박형준 1991)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의 기반 위에서 ‘법적 소유관계로 파악된 생산관계’는 언제나 ‘기술 이용의 사회적 성격’을 정당화시킨다.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화지체 개념으로 등장했던 진보주의와 이를 초

래했던 에이리즌들의 분석은 제도경제학의 장기적 발전에 커다란 해악이 되었다. 비록 제도경제학 내에서 ‘기술과 제도’가 주류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에 해당하는 비중을 갖는다 할지라도 “제도와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제도주의자가 될 수 없고, 경제 분석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제도주의적 분석이 될 수 없다(Hamilton 1986).”

문제는 제도-기술의 구분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베블렌 자신은 기술을 도구로, 제도를 사회조직으로 배타적으로 대응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는 고정된 질서와 구조로서가 아니라 항상적인 변화와 유동 상태로 실존한다는 베블렌의 진화적 제도주의(evolutionary institutionalism)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와 진화 간의 카르테시안적 이분법이 극복될 필요가 있었다.<sup>7)</sup> 기술 및 제도 범주들이 이분법(dualism)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행위들을 하나의 문화적 과정의 부분들로 다루는 것이다. 이 경우 제도는 도구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 양자 모두를 지니는 것으로 재정의된다. 두 측면은 “최소한 잠재적으로 모든 행위 안에 동시에 공존(Foster: Waller 1994)” 한다.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자명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진실이 두 이론 전통 모두에서 격렬한 논쟁과 많은 이론적 성찰을 거친 이후에야 수용되었다. 세속화나 속류화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진실의 회복을 위해 치루어야 할 비용은 더욱 증가하였던 것이다. 많은 논쟁과 자기 반성을 통해 두 이론 진영 내부에서는 기술과 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 문제를 둘러싼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도출되었다.

정치경제학의 경우, 앞서 언급된 ‘오직 하나의 동일한 복합적인 사회적 과정’에 대한 접근이 알튀세(L. Althusser)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헤겔적이지도 않고 데카르트적이지 않는 맑스 고유의 총체성 개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층 결정적 인과성(overdetermined causality)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맑스의 사회 구성체론을 재구성할 경우, 토대는 상부구조를 중층 결정한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각각에 대해 그들 존재의 조건들이다. 상부구조 역시도 토대의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도 또한 각각의

7) “만일 우리가 제도를 의식적인 것과 도구적인 것으로 분류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제도적 과정(institutional process)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를 편애하는 우리의 선입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Hamilton 1986, p. 530).”

존재 조건들이다. 다음의 사실들이 맑스의 논의로부터 나온다; 첫째, 사회 없는 생산, 즉 사회적 관계 없는 생산이란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만일 생산관계가 그 존재 조건으로 생산 그 자체를 갖는다면, 생산은 그것의 존재 조건으로서 그것의 형태, 즉 생산관계를 갖게 된다(Althusser: Cullenberg 1999, p. 807).

여기서 그는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단순한 현상 형태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기술결정론을, 상부구조는 토대의 단순한 현상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경제결정론을 거부하였다(Cullenberg 1999). 비록 ‘최종 심급에서의 경제에 의한 결정’이라는 단서로 인해 결정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알튀세의 이러한 기여로 인해 총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모순들 간의 관계는 이전의 견해들보다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세련되었고,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사회의 실제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었다.

정치경제학에서와 동일한 함의를 갖는 교훈이 제도경제학 분야에서도 등장하였다. 앞서 정치경제학의 경우 “사회구성체 내부에서 토대와 상부구조 혹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 전제”가 그 중요한 교훈이었다면, 제도경제학에서 그것은 “시스템의 진화와 성과는 기술과 제도 간의 긴장적 상호작용의 함수”라는 점이었다. 사회는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기술은 자율적이지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도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들의 배열들로 존재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기술이 선택되는 과정은 권력 구조에 의존하는데, 다시 권력구조는 그 속성상 사회경제적 관계에 기반을 둔 제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는 “기술의 선택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 어떤 선택과 이해관계가 중요한가에 대해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Samuels 1977).”

기술과 제도의 이분법은 신고전파 후생 경제학과 동일한 한계에 직면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최적 해는 특수한 권력구조를 의미하며, 권리와 이해관계의 특수한 설정을 요구한다. 이와 대단히 흡사하게 제도경제학에서 효율적 기술의 결정과 이를 통한 제도적 제약의 제거는 권리와 이해관계의 특정한 설정을 필요로 한다. 두 경우 모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권리와 이해관계의 설정은 제도의 함수, 즉 권력구조의 함수이다. 누구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중요한가에 관한 암묵적인 전제 없이 권리의 결정에 효율성을 사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효율성은 권리의 함수이기 때문이다(Samuels 1977, p. 882).

결국 기술은 유일한 독립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이자 동시에 종속변수이다. 다시 말해 제도는 기술의 함수이고, 기술은 제도의 함수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큰 이점은 모든 유형의 결정론적 감염에 대해 이론의 저항력을 증대시켜준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이제까지의 두 이론 간의 비교사적 서술을 읽어 내려가면서 혹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 두 이론 체계 간의 유사성은 제도적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이론의 생애 주기상 공통의 단계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볼 수 없을까? 물론 하나의 이론이 출현하고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는 모든 이론이 그 발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공통의 경험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각 이론 내부에서 속류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속류화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던 논쟁의 맥락이나 구조이다. 이러한 논쟁의 맥락과 구조의 유사성은 이중성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를 이해하려고 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의 유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 VII. 주 의

본론의 마지막인 이 절에서 강조할 점은 앞서의 모든 논의가 맑스와 베블렌, 그리고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간의 허구적 유사성으로 과장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절의 목적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순화시켰던 앞서의 설명들에 대해 해독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가 가장 높은 긴장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두 이론 간의 차이는 진화주의에 관한 입장의 차이이다. 베블렌은 자신의 제도주의를 진화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구축하였고 이로 인해 그에게는 다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진화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신고전파는 물론 맑스 정치경제학 역시도 균형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여겨, 전자의 가격론과 후자의 노동가치론 모두를 이론적으로 기각하였다.<sup>8)</sup> 반면 맑스는 초기의 찬사(‘역사에서의 계급투쟁을 위한 자

8) 베블렌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맑스 경제학은 그 기본 가정과 전제들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Landreth and Colander, 1994). 흥미로운 점은 베블렌이 자신의 진화적 제도주의를 과학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맑스 역시 자신의 정치 경제학을 과학적 이론

연과학적 토대', Hodgson 1993) 와는 대조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다윈주의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맑스주의와 다윈주의의 불화는 다음 2가지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① 맑스와 엥겔스는 다윈주의가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다윈주의의 맬더스적 경향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례로 이해되었다.  
 ②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맑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던 기계주의적·고전 역학적 세계관에 사로 잡혀 있었으며 따라서 유기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다윈의 진화 개념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Hodgson and Samuels 1994). 다시 말해,

커다란 다양성과 가변성을 수반하면서 개별 실체들의 인구 사이에서 자연선택과정 이 진행되고 이로부터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고는 역사를 계급투쟁에 참가한 집단 들 간의 충돌로서 이해하는 관점과는 분명 상이하다(Hodgson and Samuels 1994, p. 57).

용어상의 피상적 유사성을 제외한다면 계급투쟁과 다윈의 '생존을 위한 투쟁' 및 '자연선택'의 원리 사이에는 그 어떤 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운동 의 변증법이 다윈의 생물학적 원리를 통해 진행된다면 사회적 변화의 성격과 형태 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윈주의에서는 변화란 우연한 변이, 예 측할 수 없는 현상, 그 결과에 있어서의 고도의 불확실성, 비결정론적 성격으로서 발생하기 때문이다(Harris: Hodgson 1993, p. 78).

둘째, 두 이론 간에 차이점으로 또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인간 행위의 원리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이다. 맑스는 주류경제학의 합리성 개념이 역사적 사회적 구 성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계산적 이기적 개인은 자본주의 사회 발흥의 원인 이 아니라 결과에 해당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개인은 진정으로 고립되거나 이기적 일 수 없으며,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개념의 출현은 경제 사회 내에서의 역사의 실 제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한편 베블렌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찰되는 이기적 계 산 행위를 역사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원시사회(savage society) 시기 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면, 야만사회(barbarian society) 시기의 개인 행위는 이기적 계산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었다(Stanfield 1995).

---

(과학적 사회주의)이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서로 상이한 2개의 과학이 충돌한다.

순수한 합리성이 허구적인 개념이며 그 역시도 역사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둘 모두 공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의 합리적·쾌락주의적 가정에 대한 베블렌의 비판은 맑스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맑스가 계급적 물질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데 반해, 베블렌은 본능(instincts)과 습관(habits)이 인간 행동의 이해에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전자에게 있어 계급투쟁이 역사 발전의 모티프였다면 후자에게 있어서는 본능과 동기가 제도 변화의 모티프였다.

셋째, 맑스와 베블렌의 제도들은 실존양식에 있어 차이가 난다. 맑스의 경우 사유재산이 자본주의의 모든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타 제도(meta-institution)라고 한다면, 베블렌의 경우 인간의 본능과 동기가 모든 구체적 제도들의 원형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인 분석 대상의 차이로 이어진다. 특히 베블렌에게 있어 제도란 '사람들이 그 안정성과 궁극성에 관해 실제로 의심을 품지 않는 행동의 원리'로 이해되는데, 이를 맑스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상부구조적 현상에 해당한다(Roll 1956). 사회분석의 출발점으로 이처럼 베블렌이 상부구조를 주목하였음에 반해, 맑스는 토대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상부구조와 토대라는 구분과는 독립적으로 제도를 또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9)</sup> 흔히 정치경제학적 제도 접근은 사회 제도를 '글자 뜻 그대로, 그리고 경험적인 의미'로만 이해한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즉 정치경제학은 공식적인 제도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식의 외부적 제도화(external institutionalisation)가 사회관계의 객관적 형태를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관계의 물질적 성격을 수반하는 내적이고 순수하게 물질적인 객관화(objectivisation) 역시 특정한 외부적 제도화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Théret: Robles Jr. 1994).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비공식적인 제도를 강조하는 제도학적 접근과는 차이가 난다.

넷째, 앞서 지적한 점들이 대체로 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두 이론 간의 차이였다면 둘 사이에는 대안적 사회를 위한 주체의 설정 문제에서도 차이가 난다. 주지하다시피 맑스가 생각한 대안적 사회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었다. 반면

9) 예를 들어 국가는 상부구조에 속하지만 공식적 제도이기도 하다.



베블렌이 미래를 위해 희망을 걸었던 집단은 기술자·발명가·숙련노동자 등 전문가 집단이었다. 물론 그들 어깨 너머로 희미하게 산업 노동자 계급이 보이지만, 베블렌에게 있어 다음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는 테크노크라트 집단이었다. 그에 따르면 조직화된 노동, 즉 노조는 오히려 비즈니스 세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였다. 노조 역시 금전적 동기의 희생물이 될 수 있으며(Roll 1954), 노동 운동 역시 부채 소유와 고용 노동에 기반한 산업시스템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상정했던 주체들 모두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두 경우는 유사하다. 전후 서구의 노동자 계급은 혁명적 노동 운동에 등을 돌렸고 실리적 조합주의(bread-and-butter unionism) 노선을 추종하였으며 결국 체제 내화되었다. 이는 엔지니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불황으로 엔지니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니었으며, 가격을 통한 자원 배분 및 분배 시스템의 종언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베블렌은 생산적 과정을 통제하는 그 어떤 개인들의 집단에게도 이기적 행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실패하였다. . . . 엔지니어들의 등장은 돈벌이 과정(making money)에서 새로운 기득권만을 발생시켰을 따름이었다(Ekelund and Hebert 1997, p. 424).

우리가 이 절에서 살펴본 두 이론 간의 이러한 차이들은 다소 역설적이지만 두 이론 간의 ‘잃어버린 고리’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차이점은 공통성의 전제이며, 전자가 후자를 부각시켜주기 때문이다.

## VIII. 요약으로서의 동기

글의 결론에서 저술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왜 두 이론 간의 ‘잃어버린 고리’를 연구의 주제로 선택했는지 그 동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글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보기로 한다.

이단 경제학(heterodox economics)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떠올리는 의문이 있다; (사실 본문에서도 언급한 구절이기도 한데) 왜 정치경제학은 제도적 분석을 자신의 연구 방법으로 당연히 여기는가? 그리고 왜 제도경제학은 사회관계 및 생산관계를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여기는가?

필자 역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도중 우연히 쓰루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맑스의 소재 및 가치의 이중성 개념 안에 제도적 계기가 내재해 있다는 그의 주장은 앞서의 의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만일 제도적 계기를 도출하는데 이중성 개념이 일반적 방식이라면, 처음부터 제도로부터 출발했던 구제도학과에게도 그러한 이중성 개념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베블렌을 포함한 많은 구제도학과 경제학자들의 저작 안에서도 기술 및 제도의 이중성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두 이론 체계의 유사성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맑스는 생산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제도로 나아가려 하였던 반면, 베블렌은 제도로부터 출발하여 생산관계로 나아가려고 하였다. 이는 곧 이 두 사상가가 이론적 공간(theoretical space)의 어느 한 점에서 조우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게 되자 이제까지 두 이론 진영 내에서 있었던 중요한 논쟁들 역시 그 때까지는 인식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맑스 이후 정치경제학 논의들은 제도로 진전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제 결정론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베블렌 이후 제도경제학 논의들 역시 생산관계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두 이론 진영 내에서는 이중성의 두 측면을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인식은 특히 정치경제학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맑스는 자신의 연구 범위를 교환가치의 세계만으로 한정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제약을 통해서만 자본가의 착취가 폭로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맑스의 체계 내에서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와 분리되어 있으며 단지 전자가 존재해야만 후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前提)의 역할만을 수행할 따름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용가치 개념을 이론 체계 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 사용가치는 가치와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술은 문화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중성의 두 요소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은 욕구(needs)나 엔트로피(entropy)와 같이 이제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새로운 인식과 이를

10) 첫째, 이 새로운 인식은 가치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소비자의 욕구가 단순하고 표준화된 단일품종의 상품이 대량생산될 경우”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독립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통한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혁신은 이후 정치경제학 연구의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중성 개념을 통해 맑스 이론과 베블렌 이론, 나아가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간의 연결 고리를 규명하려는 이 글의 문제의식은 도입부에서 언급된 것처럼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학 철학자였던 라카토스(Lakatos)는 이론의 현실 설명력이 증가하는 경우 그 이론을 ‘진보적 연구 프로그램(progressive research programme)’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상품 시장에서 교환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의 광장에서도 이론 간 교류를 통해 대화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간 대화는 한 이론이 진보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정치경제학이 라카토스적인 의미에서 진보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경제학과의 이론적 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대화는 공통의 대화 코드를 필요로 한다. 결국 이 글의 미덕은 이중성 개념이야말로 그러한 대화의 실마리임을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 참 고 문 헌

1. 김영용,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정치경제학 혹은 제도경제학?: 현대 자본주의 인식의 새로운 원천을 위한 정치경제학의 제도경제학 수용 문제, 『사회경제평론』, 19호, pp. 5-60, 2002.
2. 김형기, 『새정치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2001.
3. 박형준, 『현대 노동과정론: 자동화에 대한 연구』, 백산서당, 1991.
4. 元田 厚生, 『經濟學のパラダイム・チェイソジ』, 創風社, 1998.
5. Bazzoli, L., Thierry Kirat and Marie-Claire Vieleva, "Rules, Contract, and Institution in the Wage-Labor Relationship: A Return to Institutionalism?," *Journal of Economic Issues*,

---

기존의 노동가치론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품종의 상품이 생산되는 오늘날, 사용가치와 가치 간의 통합적 시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또한 이 새로운 시각은 정치경제학 연구의 시야를 생태학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자본의 재생산은 자연의 재생산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기존의 정치경제학이 가치 분석에서 출발한다면, 생태의 정치경제학은 사용가치 분석에서 출발한다.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사회적 조절의 결과이다(김형기 2001).

- Vol. XXVIII, No. 4, 1994, pp. 1137-1171.
6. Coriat, B. and Giovanni. Dosi, "The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Economic Change: An Appraisal of The Evolutionary and Regulationist Research Programmes," in Klaus Nielsen and Bjoern Johnson eds. *Institutions and Economic Change: New Perspective on Markets, Firms and Technology*, Edward Elgar, 1998.
  7. Cullenberg, S., "Overdetermination, Totality, and Institutions: A Genealogy of a Marxist Institution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XII, No. 4, 1999.
  8. Dobb, M.,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Ideology and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9. Dugger, W. M. and Howard J. Sherman, "Institutionalist and Marxist Theories of 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VIII, No. 1, 1997.
  10. Dugger, W. M. and Howard J. Sherman, "Comparison of Marxism and Institutionalism,"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XI, No. 4, 1994.
  11. Dyer-Witthford, Nick, *Cyber-Marx: Cycles and Circuits of Struggle in High Technology Capitalis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9. (신승철 외 옮김, 『사이버-맑스: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이후, 2003)
  12. Etienne B., *Cinq Études du Maté rialisme Historique*, Francois Maspero, 1974. (이해민 옮김, 『역사유물론 연구』, 푸른산, 1989)
  13. Ekelund Jr., Robert B. and Robert F. Hebert, *A History of Economic Theory and Method*,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1997.
  14. Fiorito, L., "The Missing Link: Institutional and Marxism in American Economic Thought," *Quaderni del Dipartimento di Economia Politica Working Paper*, No. 218, 1997.
  15. Foley, D. K., *Money, Accumulation and Crisi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86.
  16. Froelich, P., *Rosa Luxemburg: Gedanke und Tat*, 1967. (최민영 역,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과 실천』, 석탑, 1991)
  17. Hamilton, D., "Technology and Institutions are Neither,"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 No. 2, 1986.
  18. Hodgson, G. M., "Institutional Economic Theory: The Old versus The New," in *After Marx and Sraffa: Essays in Political Economy*, MacMillan, 1991.
  19. \_\_\_\_\_, "Revolutionary Evolution: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Economics and Evolution: Bring Life Back into Economics*, Polity Press, 1993.
  20. Hodgson, G. M. and Warren J. Samuels, "Marx, Karl," Geoffrey M. Hodgson et al. eds. *The Elgar Companion to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L-Z*, Edward Elgar, 1994.
  21. Hunt, E. K.,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 Critical Perspective*, Wardsworth Pub. Co., 1979. (김성구, 김양화 공역, 『경제사상사』, 풀빛, 1983)
  22. \_\_\_\_\_, "Class, Social in Institutional Economics," Geoffrey M. Hodgson et al. eds. *The Elgar Companion to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A-K*, Edward Elgar, 1994.
  23. Landreth, H. and David C. Colander, *History of Economic Thought*, Houghton Mifflin

- Company, 1994.
24. Mandel, E., "Introduction" in Karl Marx,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I., Vintage Books, 1981.
25. Marx, K., *Marx/Engels Collected Works*, Vol. 22, Progress Publishers, 1975. (김세균 감수,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I』, 박종철 출판사, 1991)
26. Mouhammed, A. H., "Veblen's Economic Theory: A Radical Analysi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Vol. 32, No. 2, 2000.
27. O'Hara, P. A., "The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cs: General Issues of Continuity and Integration,"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IX, No. 1, 1995.
28. \_\_\_\_\_, *Marx, Veblen, and Contemporary I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Principles and Unstable Dynamics of Capitalism*, Edward Elgar, 2000.
29. Ramstad, Y., "Veblen, Thorstein," Geoffrey M. Hodgson et al. eds. *The Elgar Companion to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L-Z*, Edward Elgar, 1994.
30. Roemer, J., "Rational Choice' Marxism: Some Issues of Method and Substance," in John Roemer ed. *Analytical Marx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31. Roll, E.,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Prentice-Hall, 1956. (정윤희 역, 『경제사상사』, 까치, 1987)
32. Rubin, I. I.,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Ink Links, 1979.
33. Samuels, W. J., "Technology Vis-a-vis Institutions in the JEI: A Suggested Interpretation,"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I, No. 4, 1977.
34. Sherman, H. J., *Reinventing Marxis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35. Stanfield, J. R., "Radical Economics, Institutionalism, and Marxism," *Economics, Power and Culture: Essays in the Development of Radical Institutionalism*, MacMillan Press, 1995.
36. Tsuru, S., *Institutional Economics Revisi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7. Waller, W., "Veblenian Dichotomy and Its Critics," Geoffrey M. Hodgson et al. eds. *The Elgar Companion to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L-Z*, Edward Elgar, 1994.

## Marx-Veblen Connection: A Study of Missing Link between Political Economy and Institutional Economics

Young-yong Kim \*

### Abstract

For the shake of dialogue between political economy and institutional economics, we need to extract their common denomin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inimum of grammar which is necessary to communicate each other, that is, missing link between two theories.

To answer the purpose, we have paid attention to the concept, 'dichotomy' which is embedded in both theories. Based on this concept, the distinctive perspective on capitalism, we can understand the fundamental similarity of theoretical controversies in both theories since Marx and Veblen.

**Key Words:** political economy, institutional economics, dichotomy

---

\* Research Fellow, The School of economics and commer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